

한-일 과거사 논란, 경제갈등으로 확산되나

강제징용 배상, 韓 조선 WTO제소로 화풀이? 日의 몽니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 요청
저가수주 조장에 피해 야기 주장
양국 간 정상외교까지 영향 받아

일본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의 조선업체 공적지원 문제를 트집잡으며 경제 보복으로 응수하는 모양새다.

성격이 다른 두 사안을 연결해 국제사회에 한국이 부당하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6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관련 지원 및 성동-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주재내 대한민국대사부를 통해 송부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측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

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일본의 강한 반발은 양국 간 정상외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중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간 대립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일본의 외교사령탑인 만큼 양국 간 이견을 조정하

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막말 수준의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등 매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 한 직후 전성현(17)양이 자신이 직접 만든 강제징용 기림 배지를 원고 이춘식(94) 씨에게 전달하고 포옹하고 있다. /연철뉴스

단전·단수에 쫓겨까지... 갈등 여전

르포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니

상인-수협 '대립' 사흘째 이어져
수협 '보이기 식' 제안 못 미더워

'철거' 벽에 쓰여진 붉은 글씨를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가니 찬 공기와 함께 컴컴한 옛 노량진수산시장이 보였다. 단전·단수3일째, 상인들은 초를 켜야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7일 오전 6시,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 내부는 굉음으로 가득 차다. 지난 5일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 바가지로 수조 안의 물을 퍼다 붓기를 반복했던 상인 김모(60)씨는 어제(6일) 발전기를 빌렸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 작은 건 5만원, 큰 건 20만원까지 한다"며 "수산시장에 물·전기를 끊어 상인들을 말려 죽일 셈인가 보다"고 했다.

시장 내부는 상인들이 켜놓은 촛불로 간간히 형체만 알 수 있었다. 이른 아침 문어를 구매하기 위해 신(新)시장에 들렀다 구시장으로 왔다는 한 부부는 문어 형체만 보고 "알마냐"고 물었다. 촛불아래서 불편으로 장부를 꼭꼭 눌러쓰고 있던 상인 김모씨는 어두운 불빛에 손님이 온지도 모르다 목소리를 듣고서야 랜턴으로 문어를 비추며 가격을 말했다.

시장 한 켠에서는 아침식사도 이어졌다. 어제 늦은 저녁까지 농성을 했다는 상인들은 모두 "임대료와 점포면적 때문에 신시장 입주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진열을 마치고 물에 밥을 말아 한술 떠던 이모씨는 "새 시장은 통로가 좁아서 물건을 보관하고 진열하기도 힘들다"며 "수협이 약속과 달리 점포 면적은 줄이고 임대료를 높여서 거부하는 건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옆에서 난로를 쪼며 몸을 녹이던 김모씨도 "(신 시장에서) 수조로 장



7일 오전 6시, 구 노량진수산시장앞에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즉각 중단하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나유리 기자

사하는 사람들은 진열대가 나와있어 그나마 낫다"며 "생굴, 소라 등 박스 채로 팔아야 하는 상인들은 박스를 점포 안에 넣어야 하는데 박스가 다 들어가도 못할 뿐더러 나 앉을 자리조차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인들은 이제 수협 측의 제안도 못 미덥다고도 했다. 1.5평의 매장을 2평으로 늘리고 300여원의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어떤 계획서도 없이 말로만 '보이기 식'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굴을 파는 김모씨(55)는 "1.5평을 2평으로 늘려준다고 인심 쓰듯 말하지만 2평의 임대료는 우리가 다 내야 하는 것"이라며 "신시장 내부는 칸막이가 다 되어있는데 그걸 모두 부시고 2평으로 늘려준다는 건지, 장사가 잘 되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해 준다는데 그러면 점포는 개수가 줄거나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상인들의 질문에 수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우선 신시장에 들어오라고만 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명도소송 유명무실... 답답한 수협

답답하긴 수협도 마찬가지다. 앞서 4차례 법원의 강제집행이 있었지만 상인들이 무력으로 막아 질차에 따라 단전·단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수협은 지난 2015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완공하고

2016년 3월 정식으로 신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을 열었지만 상인들이 임대료와 점포면적을 문제로 신시장으로 입주하기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후 수협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2016년 3월)으로 올해까지 약 3년간 명도소송을 이어왔고 지난 8월 17일 대법원은 원고인 수협 측의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협 입장에서는 신 시장 입주가 시작되면서 계약이 만료된 구 시장은 허물고 도로를 새로 놓는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인들이 신시장 입주를 거부해 2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의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더 이상 도매시장의 기능을 마비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협관계자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민들이 내보낸 수산물 출하를 막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입주 희망자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해 이전을 지원하고, 신청 종료 후 신시장 잔여 자리는 어업인과 일반인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인들이 오는 9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신 시장에서 함께 장사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붕괴 우려가 있는 구 시장을 우선 폐쇄, 강제 퇴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주택시장 흑한기 예고’

전국 HBSI 전망치 40선으로 추락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11월에도 주택시장 흑한기가 전망된다. 9·13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사업자가 예측하는 11월 시장 전망치가 22개월 만에 40선으로 추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택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10월 전망치 및 9월 실적치' 자료를 보면, 전국의 11월 전망치는 47.4로 전월 대비 21.6포인트 하락했다.

9·13 대책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일제히 급락했던 수도권 등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2017년 1월(48.1) 이후 22개월 만에 40선을 기록한 것이다.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는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다. 매월 이달의 실적과 다음 달의 전망을 동시에 조사하며, 지수(1~200)의 값이 100 이상이면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고 그 이하는 반대를 뜻한다.

지난달 30포인트 이상 급락했던 서울과 세종은 10월에 일부 조정과정을 거쳐면서 70선에 머물렀다.

서울의 경우 9월 전망치는 112.5였으나 실적치는 77.0에 머물렀다. 10월 전망치는 80.8로 급락했고 실적치는 74.6으로 더 낮았다. 11월 전망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73.8이다. 세종시도 지난 9월 103.4로 서울과 함께 전망치 100선을 넘었다가 10월 67.7로 35.7포인트가 빠졌다. 11월 전망치는 77.7로 오히려 올랐다.

주산연은 "공급과잉 및 지역산업 위기에 따른 지방주택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수도권 주택사업경기가 위축된 상태"라며 "아울러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등에 의한 수요위축, 재개발·재건축 HBSI 전망치 등의 동반 하락으로 11월 주택건설 수주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11월 요인별 HBSI 전망치는 재개발은 76.9, 재건축 75.5, 공공택지 84.3으로 전월 대비 각각 9.6포인트, 9.1포인트, 2.9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모두 기준선(100)을 하회해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 수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무상급식 확대 '복지 포퓰리즘' 비판도

>> 1면 '미래세대 위한 보편...'서 계속

박 씨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라도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김모(34) 씨는 "요새 누가 밥 굶고 다니냐.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전형적인 보여주식 전시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기준 무상급식 예산은 약 4533억원에 달한다. 이를 서울 전체로 확대하면, 2019년 970억원, 2020년 1580억원, 2021년에는 약 2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예산지원 비율은 서울시 30%, 서울시 교육청 50%, 자치구 20% 등이다.

또 하나의 논란은 그간 무상급식 대상

이 아니었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이번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 돈으로 차라리 학교 화장실 등 시설 공사를 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쓰는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상급식 보다는 급식을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이 낮아져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문제도 있다. 무상급식 보다는 집값이나 물가를 잡으라는 요청도 이어진다.

따라서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급식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권을 노린 박원순 시장의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정 기자 hik1@